

David Fedman, *Seeds of Control: Japan's Empire of Forestry in Colonial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292 pp.

배상희†

환경사학자 데이비드 페드먼(David Fedman)의 저서 *Seeds of Control: Japan's Empire of Forestry in Colonial Korea*(2020)는 일제의 산림녹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이뤄진 제국주의적 산림관리를 분석한다. 전시동원체제 아래 일제가 한반도의 산림자원을 수탈하고 자연을 황폐화시켰다는 맥락에서 일제가 행한 산림관리의 역사는 주로 일방적인 산림수탈로 그려져 왔다. 반면 일제가 전시체제기 이전까지 대대적인 한반도 녹화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페드먼이 책에서 제시하는 통계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기념식수일에 거행되던 나무심기 캠페인을 통해서만 약 5억 9천6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조선총독부 산림관료들은 산림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산림정책을 주도할 단체를 조직했으며, 이들이 개발한 정책적 틀은 한반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어 1930년대 초에 일본 본토로 역수입되기에 이르렀다(198-199). 일제가 조선의 산림녹화에 이토록 노력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을까? 페드먼은 일본의 산림관리가 제국주의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핵심적인 영역이었다고 주장한다.

*Seeds of Control*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산림녹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한반도를 렌즈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페드먼은 오늘날까지 환경사학과 일본사학계에 팽배한 “녹색 열도(Green Archipelago)” 담론을 비판한다. 역사학자 콘라드 토트먼(Conrad Totman)은 저서 *The Green Archipelago*(1989)에서 일본이 고도의 산업화를 겪으면서도 서구 국가들과 달리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 특유의 오래된 산림관리 전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저서가 출간된 이후 서구의 환경사학자들은 토트먼의 논의를 비판 없이 수용하며 산림관리의 모범적 모델을 일본에서 찾고자 했다(13). 일본 역사학자들 역시 일본의

† 서울대학교, shbae25@snu.ac.kr

자연 보존적 실행을 오래된 전통으로서만 묘사해왔으며, 이것이 제국주의적 실행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밝히지 못했다. 반면 페드먼은 일본의 산림관리를 열도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과거 일본의 식민지국과 연결해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산림관리가 제국주의적 통치의 수단이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책은 총 3부에 걸쳐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제국주의적 통치가 산림관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책의 1부에서는 일본에서 산림관리가 이데올로기적인 통치 수단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이 통치 수단이 조선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분석하며, 3부에서는 산림관리가 조선인의 몸과 정신을 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장치로 거듭나는 과정을 묘사한다. 일본 본토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산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은 메이지 시대(1868-1912)에 강화되었다. 이전 시기인 에도 시대까지 산림관리가 경작률을 높이고 자연재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메이지 시대의 산림관리는 국부와 국력을 강화시킨다는 새로운 목적과 연결되어 국가적인 아젠다로 거듭났다.

페드먼은 이러한 일본의 국가주의적 산림관리 체제가 산림관리의 중앙집권화, 숲 공간의 신성화, 과학적 산림학의 전문화, 그리고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이라는 네 가지 측면의 변화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에서는 극심한 산림 파괴가 일어났다. 이에 메이지 정부는 산림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880년대부터 임야지 소유관계를 정립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산림자원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일본의 숲 문화의 전통에 대한 이론가들의 수사와 결합해 ‘애림사상(愛林思想)’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탄생했다. 유럽 산림학 지식을 학습한 혼다 세이로쿠(本多静六), 사이토 오토사쿠(齋藤音作), 아사카와 다쿠미((浅川巧) 같은 과학적 산림학 전문가도 양성되었는데, 이 전문가들은 메이지 시대 일본의 영토 확장으로 인해 새로운 지역을 산림학 실험실로 삼아 훈련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중층적 변화를 통해 숲 공간은 “자본주의의 건축재이자, 황제 숭상의 장소이며, 국가 위신의 상징”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페드먼은 이를 “산림학의 제국주의화(imperialization of forestry)”라고 일컫는다(25).

산림학의 제국주의화는 식민지시기 조선에서 이뤄질 산림학 연구와 제국주

의적 통치의 토대가 되어주었다. 20세기 초 조선을 방문한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메이지 시기 국가 중심의 산림관리 체제로 이행하며 녹색으로 뒤덮인 일본 열도의 모습과 산림이 파괴되어 붉은 민둥산으로 가득한 한반도의 모습을 대비시켰다. 이들은 한반도의 붉은 경관을 무엇보다도 조선 정부의 전근대적인 통치술과 그 유교적인 뿌리에서 비롯된 산림파괴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¹ 동시에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 북부, 특히 압록강 유역의 푸르른 풍경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들은 황량한 한반도 남부와 숲이 울창한 한반도 북부를 대비시켜 한반도 남부지역 역시 적절한 관리 아래에서 자연이 되살아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이 있는 땅임을 설파했다. 이처럼 한반도의 경관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일본제국의 산림관리가 한반도의 숲을 되살릴 수 있다는 수사이자 제국주의 통치의 정당화 근거가 되어주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과학적 산림관리의 정당성과 수단, 경험을 모두 확보했지만 열도와 상이한 기후와 환경을 가진 한반도에 일본의 산림관리 실행을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었다. 책의 2부는 식민지시기의 초반 30년(1907년-1937년) 동안 이행된 조선총독부의 산림정책을 분석한다. 페드먼은 조선총독부가 산림관리를 통해 한반도의 자연과 조선 인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을 그리면서도 동시에 이때 시행된 정책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의 산림을 통치하기 위해 먼저 산림과를 설립하고 임야지 소유권 체제의 개혁을 시도했다. 1907년 제정된 산림법은 임야지 소유자들이 3년 이내에 소유권을 등록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농민이 임야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관습에 익숙했고,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가 없거나 조선총독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토지 측량을 실시할 경비가 부족해 산림법에 응하지 못했다. 어떤 농민들은 산림법을 새로운 종류의 토지세를 거두기 위한 절차로 의심해 소유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관료들은 전국의 산림 상태와 소유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특정 임야지에서 국가가 설정한 기준에 맞춰 조림을 이행한 자에게 해당 임야지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산림령을 제정해야 했다. 페드먼은 이러한 산림관리를 위한 제도의 확립 과정이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조선의 지

¹ 이러한 일본인들의 관점은 식민지 정부보다는 인민들의 전근대적 생활양식을 문제 삼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관점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시각과 달리 조선은 이미 긴 시간에 걸쳐 정착된 국가적인 산림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50).

역적 풍습과 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미세 조정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분석한다.

한반도에 실제로 나무를 식재하고 육성하는 일 또한 일본의 나무를 이미 알려진 산림학 지식을 이용해 조선 땅에 이식하는 정도의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다. 저자는 일제의 산림관리가 지닌 식민지적 맥락을 강조하여 조선에서 행해진 과학으로서의 산림학이 서구의 보편적 과학지식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보이고자 하다. 일본 학자들은 조선의 산림녹화를 위해 조선인 학자와 협력해 한반도의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판별하고 식림법을 개발해야 했다. 이를테면 식물학자 이시도야 쓰토무와 아사카와 다쿠미는 한반도의 지형이나 기후뿐만 아니라 조선 농민들의 실행이나 나무와 연관된 민속 신앙까지 탐구했는데, 이러한 연구는 조선인 식물학자 정태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산림학이 점차 제도화되면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곳곳에 임업시험장을 설치했는데, 이러한 임업시험장은 산림학자와 산림학 지식, 그리고 조선 땅에 심어질 식물 개체가 순환하는 네트워크의 결절점이 되어주었다. 식민지적 맥락 속에서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교류의 두터운 거미줄”이 형성되면서 서로 다른 “지식 형태 사이의 혼종화(hybridization)가 촉진”되었던 것이다(117).

페드먼은 산림관료와 산림학자들의 실행에 이어서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벌목업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여 조선의 산림이 일본 기업가, 식민정부, 중국 목재상, 화전민 등 다양한 행위자가 경합하던 장소였음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조선총독부가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해 세운 영림창(營林廠)은 압록강 유역의 산림관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영림창은 목재 가격 책정부터 운송에 이르기까지 벌목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실행에 정책적으로 개입해 일본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조선총독부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영림창과 같은 강력한 행위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압록강 유역에 터를 잡은 자본가들은 만주 자본가들과의 경쟁 관계와 일본 의회의 관세법 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페드먼은 압록강 유역에서 벌목업이 성장하고 다시 쇠퇴하는 과정을 추적하며 일제와 조선총독부의 산림개발이 단순하고 일관된 정책이 아닌 “유동적인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인다(146). 일제의 산림개발이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개별 기업의 착취구조가 아닌 댐이나 철도와 같은 상업적이고 물질적인 인프라스트럭처였다는 것이다.

일제의 산림관리는 한반도 북부의 깊은 산 속의 구조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

었다. 페드먼은 농촌사회의 일상적인 실행이 일제의 산림관리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도 탐구한다. 조선의 농민들에게 산림은 땀감과 같은 연료의 원천이자 조상 숭배의 공간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전부터 송계(松契)를 통해 공유산림과 선산을 보호하고 서로를 규제했다. 조선총독부의 산림관료들은 송계 제도의 목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농촌 단위에서 소규모로 이뤄지는 산림관리가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규모의 산림보호 실행을 국가 주도의 통제와 관리가 수월한 구조로 규합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조선총독부의 관료들과 산업계의 엘리트 인사들이 모여 조직한 조선산림회가 한 예였다. 조선산림회는 농민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보다는 산림조합, 목탄생산협동조합 등의 반관적 조직을 통해 과학적 산림관리를 농민들에게 교육하고 수목의 식재부터 연료 규제까지 다양한 산림관리 실행을 관리해 지속적인 산림관리의 루틴을 정착시키려 했다. 1930년대부터는 조선총독부가 향약이나 입엽과 관련된 여러 계와 같은 한국의 민습을 동원해 농촌진흥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식민정부는 강제가 아닌 화유라는 보다 섬세한 전략을 펼침으로써 농민들의 일상적인 산림관리 실행까지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식민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제도와 조직을 통해 산림자원과 농촌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고, 이는 전시동원 체제 아래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책의 3부에서 페드먼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실시된 일제의 산림관리 캠페인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인들의 정신과 몸에 대한 제국주의적 통치의 면면을 분석한다. 먼저 식민정부는 메이지 시대에 발명된 이데올로기인 애림사상을 조선인들에게 주입해 일본인과 조선인을 정신적으로 동화시키려고 시도했다. 일본의 산림학자들은 식민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달리 풍광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지 못해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이 때문에 경관이 파괴되어 악순환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식민정부는 산림보호를 주제로 하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산림 영화제를 개최하고, 산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음악을 라디오로 송출하는 등 식민지인들의 감각 기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애림사상을 고취하려고 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대대적인 나무심기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조선인들을 계몽하고 자연 재생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일본인과 조선인을 결합시키려고 했다. 기념식수 행사는 1940년부터 일본의 황제 숭배 의례와 함께 거행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산림관리가 민족동화정책을 위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체제가 동안 조선인의 몸에 대한 통제는 앞선 시기에 정착된 산림관리 장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목재배급통제규칙’을 발표하고 행정단위 별 목탄배급조합을 의무화하는 등 산림자원의 배급량을 조절했다. 민간 산림조합은 목탄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수종으로 이루어진 연료림을 가꾸어 식민정부가 징발한 연료를 대체하려고 했다. 도시의 기업가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조된 온돌 모델을 홍보했고, 농촌의 관료들은 가정에서 사용되 는 아궁이에 덮개를 달게 했다. 지방 정부는 온돌 관리관을 두어 온돌이 산림관리 규정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식민정부와 조선산림계, 그리고 지방의 협력단체들은 동절기 동안 “저온 생활”을 실천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216). 저온 생활은 뜨거운 음식을 제한적으로 섭취하고, 침구류를 더 많이 사용하며, 온돌 구조를 하나의 방으로 통합하는 등 연료 소비를 줄이고 낮은 온도를 견디는 생활방식을 의미했다. 의사와 건축가들은 저온 생활이 전통적인 조선인의 온돌 생활과 비교해 두통과 같은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되어 더 건강하고, 화재 위험을 줄여주어 더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페드먼은 환경인문학자 롭 닉슨(Rob Nixon)이 제시한 “느린 폭력(slow viol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식민지시기 저온 생활 캠페인을 새롭게 분석한다 (222).² 닉슨에 의하면 느린 폭력은 짧은 시간 동안 극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비가시적으로 서서히 누적되어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폭력이다. 페드먼은 조선총독부의 산림관리가 식민지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장시간에 걸쳐 정신과 몸을 억압하는 느린 폭력이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산림수탈이라는 표현으로 일제의 산림관리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느린 폭력과 같은 보다 비가시적인 산림관리의 측면을 간과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산림수탈이 연상시키는 황폐해진 한반도의 지형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면, 그 뒤에 숨겨진 산림과 농민의 관계나 산림과 식민지 국가의 관계를 섬세히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페드먼의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산림관리의 역사 속에서 일제의 식민 통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전시체제기의 산림수탈이 조선인들에게 가해진 느린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페드먼은 산림관리라는 분석틀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 전략을 단순한 수탈로서만 해석하는 관점을 전환하고 이전까지 덜 주목받았던 일본 제국주

² Rob Nixon, *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의의 면면을 새롭게 조망한다. 특히 페드먼은 책의 1부와 3부에서 산림녹화가 산림수탈을 위한 밑그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일본인과 식민지민의 정신을 동화시키기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 애림사상의 세뇌를 받은 식민지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들이 이전까지 산림환경과 맺었던 관계에 애림사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적용시켰는지는 앞으로 새롭게 탐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페드먼이 인용한 롱 닉슨의 저서에서 닉슨은 “느린 폭력”이라는 개념을 “빈자의 환경주의”라는 개념과 긴밀히 연결해 식민지국이 지닌 환경문제의 모습을 그려낸다. “빈자의 환경주의”는 제국주의적 환경주의와 차별화되는 토착민들의 환경주의를 일컫는데, 이 개념과의 대비 속에서 제국주의의 느린 폭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유사한 분석적 틀을 식민지 조선의 산림관리 실행에 적용해본다면 페드먼이 그리고자 한 산림관리의 식민지적 맥락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산림녹화라는 제국주의적 환경주의에 맞서 식민지 조선인들도 자신들의 “빈자의 환경주의”를 표방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들의 환경주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페드먼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산림관리의 역사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또 다른 지점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산림관리와 해방 이후 군사정권 아래에서 시행된 산림관리 사이의 연속성이다. 저자는 산림관리 및 산림학의 역사를 탐구하는 한국의 학자들이 식민지시기 동안 시행된 산림정책의 역사를 무시하고 박정희가 일으킨 산림녹화 사업을 기적적인 것으로 묘사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학자들과 달리 저자는 식민지시기 한반도 북부의 종합 개발 사업이 과학적인 지역계획의 특징을 지녔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 아래 시행된 녹화사업과 분명한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제기한다(122). 저자가 이러한 주장을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민지시기를 배제한 단절적인 역사 서술은 오늘날의 산림관리가 과거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녔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은 특기할 만하다. 페드먼의 제안에 따라 식민지시기 산림관리와 해방 이후 산림관리를 연속선상에서 탐구해보는 작업은 각 시기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지도 모른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에 일본의 산림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일본 과학자들과 조선 과학자들이 새롭게 얻게 된 혼종적인 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그 성격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페드먼은

책의 2부에서 일본인 학자들과 조선인 학자들 사이의 협업 연구를 서구의 산림학 이론과 차별화되는 혼종적이고 새로운 산림학 연구로 그려냈다. 반면 같은 대목에서 저자가 인용한 이정희의 연구는 이러한 협업 연구가 진정으로 혼종적인 지식을 창출했다기보다는 서구 과학지식의 중심적인 위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동시에 그 위치를 강화시켜주는 지식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³ 이러한 식민지시기 산림학과 식물학 연구의 성격을 둘러싼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식민지시기의 산림관리에 어떠한 과학이 개입했고, 또 그러한 과학의 모습은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과 식민지 시기의 산림관리의 연관성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식민지시기 산림관리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산림관리가 지닌 여러 측면을 풍부하게 보여줌으로써 식민지 과학사나 한국 환경사 연구자들이 주목할 만한 다수의 새로운 논점을 제공해준다. 일제라는 단일한 권력과 한반도의 산림이라는 단일한 피해자를 상징하는 ‘산림수탈’ 담론과 달리, 산림관리라는 분석틀은 여러 행위자를 불러들인다. 식민지시기 조선의 산림은 건축용 목재, 펄프, 타닌, 생물 연료, 섬유, 땀감, 비료와 같은 다양한 소비재의 원료가 생산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와 유랑 농민의 도피처이자 다종의 비인간이 기거하는 삶의 기반이었으며, 조상의 묘지를 품은 제의적이고 영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와 용도를 지닌 한반도의 산림을 관리해야 했던 산림관료들은 산림학자, 산림 경비관, 벌목꾼, 목재 상인 등 여러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요구와 실행 사이에서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틈새의 위치(interstitial position)’에 자리했다(11). 다시 말해 저자는 단일하고 전지전능한 식민권력의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숲을 둘러싸고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잡다한 “이익 관계의 뒤범벅”을 보이는 데 더 관심이 있는데, 저자의 이러한 새로운 시선은 책을 읽는 독자들이 식민지시기 숲 공간을 앞으로 더 탐구되어야 할 낯선 장소로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이다(12).

3 페드먼은 과학사학자 이정희의 연구에 기대어 제국주의적 과학 연구에 참여한 조선인 식물학자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인과 조선인 식물학자 사이의 불균등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협업을 “멀고도 가까운(intimate yet remote)”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렸다는 점에서는 이정희와 의견을 같이한다. Lee Jung, “Mutual Transformation of Colonial and Imperial Botanizing? The Intimate Yet Remote Collaboration in Colonial Korea,” *Science in Context* 29:2 (2016), 179-211.

이처럼 페드먼은 다양한 행위자의 실행을 하나의 산림관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려내는데, 이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저자의 관심을 벗어난 행위자가 있다. 바로 산림관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나무와 숲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산림관리가 한반도의 나무와 숲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으며, 이들은 인간의 산림관리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저자는 조선의 기후와 토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본의 수종을 한반도에 그대로 옮겨 심으려 했던 일제강점기 초기의 노력이 실패해 조선의 환경에 맞는 식림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어야 했음을 잘 보였다. 이 사례는 산림관리가 제국주의자와 식민지민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저자는 책의 다른 부분에서 인간과 나무의 관계를 식재와 성장, 벌목과 파괴라는 다소 일방적인 관계로 서술하고 있다. 산림관료들이 산림녹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벌채했는지는 잘 드러나고 있지만, 이러한 인간 행위자들의 실행으로 인해 비인간 행위자들 각각은 어떻게 적응했는지는 알 수 없어 한반도의 산림이 푸르거나 황량했다는 다소 추상적인 풍경만이 그려지는 것이다. 나무와 숲은 그 자체로 산림관리 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결절점이기도 하다. 이 책이 제시하는 산림관리를 둘러싼 수많은 흥미로운 논점은 이들 비인간 행위자를 고려할 때 더욱 선명히 초점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나무와 숲은 한반도의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를 따라가다 보면 일제의 산림관리 네트워크가 해방 이후의 산림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지도 모른다.